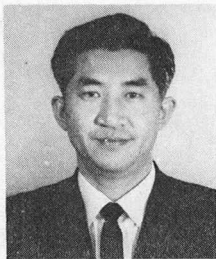


# 양돈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양돈업의 제1단계로서 농가 호당 300두 (비육돈)까지는 자유조정에 맡기고, 300~3,000두까지는 등록제, 3,000두 초과 규모는 허가제로 하고 1만두를 넘는 대규모 양돈농가의 규모는 1만두 규모로 축소조정토록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김 동 희  
(단국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 1. 현황과 당면과제

한국농업 가운데 근년 돋보인 성장을 이룩한 산업의 하나가 양돈업이라 할 수 있다.

1978년부터 1988년(6월)까지 10년간의 변화를 보면 양돈농가 호수는 66만호로부터 27만호로 약 60%가 감소하였으나, 돼지두수는 1백72만두로부터 4백61만두로 약 2.7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동안 두드러진 현상은 1,000두 이상의 큰 규모의 농장수와 그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서 대규모(5,000두 이상)의 양돈농장이 증가하고 있다. 약 30개 월로 추정되는 돼지 싸이클을 지날때마다 소규모 부업 규모의 농가는 많이 탈락하게 되었다. 이는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하여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하겠으나, 이러한 구조변화의 속도가 다른 농업부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것이었느냐의 의문도 제기하게 된다.

지난 5년 동안 1,000두 이상의 양돈농장이 109호로부커 277호로 늘었고, 두수분포에 있어서 12.6%로부터 19.2%로 그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재벌기업과 도시자본이 양돈산업에 상당수 진입함으로써 규모사이에 알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과정에서 10두 미만의 영세규모 농가수는 지난 10년간 64만호에서 20만호로 격감하여 양계업처럼 농가부산물 등으로 몇마리 사육하는 농가는 머지않아 자취를 감추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

양돈업의 제2단계로서 양돈규모를 제도적으로 조정 규제하고 돈육가격을 안정시켜 많은 양돈농가가 양돈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종업과 결합한 복합영농으로 경영 통합을 추진,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

그동안 수입 사료곡물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양돈업은 경종농업과 노동투입 외에는 별다른 연관없이 성장해 왔다. 대규모 기업양돈이 보급되면서 배합사료 자본을 중심으로 한 수직통합(垂直統合) 형태도 늘어서 가족농 중심의 양돈과 회사자본 중심의 대규모 양돈가 사이에 치열한 시장경쟁이 전개되고 있음을 본다.

그리하여 정부는 1984년 축산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양돈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그 시책내용이 미흡하여 당초의 기대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 양돈업이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이에 관하여는 서로 이해관계나 경제철학을 달리 함으로써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한국 경제와 농업의 발전단계 그리고 민주복지사회의 이상에 비추어 이를 요론코져 한다.

첫째, 오늘의 농업문제는 이제까지 고도경제성장의 그늘에서 도시화·국제화의 인력에 끌려 미처 국내 타산업 외국농업과 경쟁할 수 없는 취약성을 벗지 못하고 그대로 지닌 채 농민경제가 누적부채와 현금작물의 과잉생산에 의한 농산물가격 하락 그리고 겸업취업기회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촌인구의 교육수준이 상승하고 사회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농민의 기대수준도 높아져서 소비수준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 소득이 이에 따르지 못함으로써 젊은층의 이농(離農)이 극심하여 고령화, 부녀화로 농업노동력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한가 하면, 농촌의 공동화(空洞化)가 도시의 과밀(過密)과 좋은 대조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남아있는 농민들에게 농업소득원을 적절히 확보해줌으로써 생활안정, 부채정리,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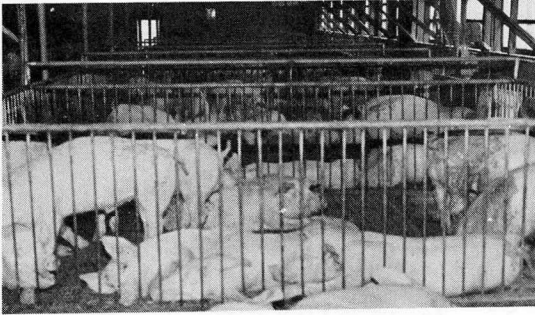
업개발투자 촉진의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할 대책이 시급하게 되었다. 둘째, 양돈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과 경영의 혁신을 지속해야 하겠다. 셋째, 돼지와 돈육시장의 유통질서를 현대화 하고 수요·공급을 안정시키는 제도 장치와 공동노력이 촉구되어야 하겠다.

## 2. 발전방향과 대책

앞으로 방향설정과 전략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두가지 면을 고루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외부적 여건변화를 전망하고 동시에 국내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화를 냉철히 살펴서 효율과 형평의 조화를 기하고 온국민이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건설에 모순되지 않고 이바지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돈업의 장기발전 방향은 아직도 소농들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농가의 사육규모의 확대는 점진적인 것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규제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농가의 부채문제가 해결되고 영세소농의 문제가 해결될때까지는 양돈업을 가족농들의 주요 소득원으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내 농업문제가 거의 해결되어가는 단계에 이르면 도시 대자본에 대하여도 자유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농민중심 양돈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동조합 방식을 주축으로 한 수평적·수직적 통합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단계적 대책으로서 제1단계로서 양돈규모는 농가호당 300두(비육돈)까지는 자유조정에 맡기고



300~3,000두까지는 등록제로 하며, 3,000두 초과규모는 허가제로 하고, 1만두를 넘는 대규모 양돈가의 규모는 1만두 규모로 축소 조정토록 한다. 이러한 행정규제 대상규모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토록 하고 정부와 농민단체,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객관적 분석과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토록 한다. 특히 여기서 주의할 점은 등록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관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참여하는 양돈경영안정위원회에서 정부와 협의하여 수급조절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도시자본이 아닌 양돈농민이 등록을 할 경우엔 등록규모범위내에서 자유로이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

현재 돈육의 평균생산비를 최소로 하는 적정사육 규모는 150~200두로 추정되는데('85년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140두), 기술혁신과 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적정규모는 점점 커질 것이다. 공업화, 도시화에 의하여 성장한 대기업과 도시자본은 지난 30년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음으로 양으로 희생을 감수하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교육투자를 해온 농민들에 대하여 이제는 보상이 주어져야 분배정의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경제성장으로 무억혹자가 늘어남에 따라 원화절상과함께 농산물 수입개방의 압력은 고조되어 우리 시장에 값싼 외국 농산물이 홍수같이 밀려들어 오고 대기업까지 축산업에 진입하여 농민들의 소득원은 점

점 잠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메꾸기 위한 다른 소득원(겸업)이 아직 발견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곤경에 빠져있는 농민경제를 직시할때 특히, 수출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은 양돈과 같은 전통적인 농가소득원은 농민에게 양보하는 슬기를 보여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이러한 긴 안목과 공영(共榮)의 정신없이 「선진화합경제」의 실현은 요원한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불안정한 돈육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양돈경영안정기금 제도를 만들어 정부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출연케하고 가격안정대(상한가격, 하한가격 설정)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가격안정뿐 아니라 멀지않아 다칠 돈육수입 자유화에도 대비하는 장치를 미리 발전시킬 수 있다. 동시에 지역별로 전국단위에 양돈경영안정회의를 두어 현재, 양돈협회에 설치된 기구를 흡수하여 그 조직과 기능을 정부기관과 농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강화하여 보다 확실한 효과를 거두게 한다.

제2단계로써 양돈규모를 제도적으로 조정 규제하고 돈육가격을 안정시키면 보다 많은 가족농들이 양돈업에 참여할 것이고 이로써 경종업과 결합한 복합영농으로 소득을 늘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것이며 이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첫단계에서는 손쉬운 부분통합부터 시작하여 완전통합을 지향하여 협동조합형태로 배합사료, 자돈생산, 육가공까지도 포함한 수직적 통합의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이와같이 매그리비즈니스에 진출할때에는 농민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자본 또는 기술도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여는것도 농업의 산업화를 향한 개방적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써는 농민협동조합이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세우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양돈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을 강화하고 기술지도 사업에 농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농장의 여러가지 문제가 곧 지도사업 계통을 거쳐 시험연구사업에 반영되도록 한다. 또, 각지역의 양돈경영안

정회의 사무국에는 법령에 의한 의무적 등록·허가업체만이 아니라 그보다 작은 규모의 농가들도 한해 3~4회 정도 사육규모를 자진보고케 계도하고 비협력 농가에 대하여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경영안정 시책은 생돈과 돈육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지않고서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산지와 도매단계의 시장 유통을 근대화하는데 정부의 투자와 제도개선 및 행정효율화가 불가결하다.

산지에 여전히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도축장을 조정하여 대규모화 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이를 식육센터로 그 기능을 강화하여 농민단체가 주관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개혁은 소매시장에서의 등급화 정착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이상과 같은 제언에 대하여 혹자는 자유기업주의에

어긋나며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후생을 저해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와같은 반론은 첫째, 양돈산업을 농민과 분리하여 하나의 자본가 우선산업으로 보는 시각이며, 둘째, 국민경제와 농업발전의 단계적 현실을 무시한 비역사적 견해이고 셋째, 농업에서의 경제력 집중은 소득분배나 자원이용 효율면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않고 있다는 비현실적 의견이며 넷째, 산업평화와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는 농률화가 분배정의와 양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현재 발전단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양돈업문제가 농업·농민문제와 동떨어져 있지 않고 그 중심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의 인식이 양돈산업의 안정적 장기발전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 강조코저 한다.\*

## 독자투고안내

「월간양돈」지는 양돈인 여러분과 함께 직접 참여하여 만든다는 마음가짐으로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돈업을 경영해 오시면서 터득한 새로운 기술정보와 소득정보 또는 성공담·실패담·임상수기·지회소식은 물론 시, 소설, 수필, 콩트 등을 보내주시면 성심껏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관심입니다. 공식적인 원고청탁이 없어서 원고를 쓰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십니다만 양축가를 위한 양돈전문지가 바로 여러분들 앞에 대면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특히, 「월간양돈」지 제작에 조연하고 싶은 사항이나 취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택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합니다.

### 보내실 곳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양돈회관 4층)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홍보부  
전화: 553-3942~7